

# 근대화의 이데올로기와 행복의 추구

김우창

(고려대 문과대 교수)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오늘까지가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였다고 하는 데는 별 이론이 없을 것이다.(이 변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변화이다.) 이 변화의 크기는 그것이 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내적인 것이라는 데 관계된다. 즉 변화한 것은 외적인 충격보다는 민족과 사회의 삶의 근본과 구조이다. 이것은 삶의 내적인 질을 바꾸면서 결국에 가서는 외면이 변화로서 표현되는 것이다.(또는 거꾸로 외면의 변화가 내면까지 바꾸어 놓는 종류의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산업화이다. 이것은 사회의 외적인 모습과 기구에 관계되는 것이면서, 산업이라는 것이 사회 성원의 삶의 구석 구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 한 삶의 내적인 결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은 것이다.

1950년대는 전쟁의 여러 파괴적 영향에서 깨어나는 데 바치어졌다.(물론 전쟁은 파괴를 가져왔으나 그것이, 적어도 사회적 구습의 파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공헌을 한 점도 고려되기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화는 주로 1960년대로부터 벌어진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의 연원은 상당히 소급되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자유당 시절이나 민주당 시절부터 경제계획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은 그 과정을 근대화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역사의 과정로서의 근대화는 19세기 말의 개항 시기에 벌써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항의 의미는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하여 달혀 있던 역사를 연다는 것이고 그러한 열림 속에서 살아 버티어 나가려면, 서구의 근대적 체제를 스스로 수립하여 나가는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불 때, 개항 이후의 한국 현대사는 그 때부터 이미 근대화의 과정을 이룩해 내려는 노력과 이 노력이 좌절한 것들이 엇갈리는 역사였다. 1960년대 이후의 근대

화는 이 성취와 좌절의 경로의 한 고비의 표현이고 특별한 표현이었던 것이다.

근대화는 여러가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흔히 밖으로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힘을 기르는 일과 안으로 전래의 제도의 모순을 제거하여 보다 살만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또는 이것은 약간 각도를 달리하여 근대적 국가체제를 이룩해야 한다는 전체적 이상과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개성의 발달을 기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민주적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근대화는, 지금까지의 그 역사적 전개의 내용으로 보아, 후자보다는 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여, 한국의 현대사가 부과한 근대화의 과업이 근대 국가 체제와 민주화를 뜻한다고 할 때, 60년대 이후에 강조된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근대 국가체제의 건설이었고, 이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상태에서나마 그 이전까지의 주요한 역사의 테마였던 민주주의를 대치하는 것이었다. 이 대치는 60년대 이후의 현상이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긴장의 원인이 된 것이었다.

근대적 국가체제의 건설이라는 의미에서의 근대화는 국가의 총체적인 힘으로서 이해되었다. 여기에 흔히 쓰인 말이 국력(國力)이었는데, 국력은 주로 산업 능력으로 생각되었고, 더 간단하게는 GNP라는 말로 요약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이라는 전후의 서양 이론에 의하여 자극된 것이지만, 연원을 따지건데 19세기 말 서양의 도전에 직면한 동양 여러나라들이 〈富國強兵〉을 기하는 것이 이 도전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한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야기된 것이었고, 또 일본에 의하여 크게 실험된 바 있었던 사상이었다.

나라의 부를 증대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西勢東漸의 상황에서 당연한 체험적 각성에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것 또한 서양의 이론에 그 뿌리를 가진 생각이기도 하다. 국제 관계의 상황에 대한 힘의 관점에서의 이해는 서양의 전통이었다. 또 마침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이러한 생각이 사회 진화론에 의하여 크게 보강된 상태에 있었다. 適者生存의 힘의 논리를 내세우는 사회 진화론은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서구의 현대적 역사관을 지배해 온 발전 사관에 이어지는 것이었다.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두드러지게 대두한 바, 역사는 발전한다는 생각은, 서양의

역사 이해의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인데, 사회 진화론은 이 발전의 원동력으로 힘의 요소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후의 경제 발전 이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의 역사를 하나의 발전 진로 속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선에 따라 세계의 모든 사회가 하나로 도열에 선다고 보고 거기에 앞서가는 자, 뒤서가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의 수립은 한국 사회가 분명하게 이러한 역사의 일직선적 발전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의 사회적 목표를 규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후진국의 위치에서 출발하여, 60년대 중반에 한 때 사람들의 가슴을 들뜨게 했던, 월트 로스토우의 <도약 단계>를 거쳐 중진국의 위치를 돌파하고 이제 바야흐로 선진국의 대열에 끼고자 노력하는 단계에 한국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의 정도에 따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힘 있고, 힘 없는 나라, 좋고 나쁜 나라로 갈린다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의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며, (또 우리 사회도 60년대 이후 그러한 세계 이해를 통하여 형성된 만큼) 우리 사회의 현실이지만, 이러한 역사 발전의 이론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며, 불가피하고 유일한 세계사의 진로라기 보다는 있을 수 있는 역사 전개의 한 방향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이 이론을 채택한 것이다. 우리의 근대화는, 다시 말하여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약체적 위치, 사회적 경제적 모순과 전쟁으로 인한 빈곤의 경험, 일본과 미국의 압도적 영향이라는 여러 현실적 요인과 합쳐, 뒤에 말한 역사관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였던 것이다.

경제적 생산 능력의 고양, 그에 따른 국력의 증대라는 것은 아마 한국 국민이, 그것이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대체로 받아들이는 국가이념이었고 또 이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의 차원에 있어서의 이념이 곧 국민 생활의 차원에서의 행동동기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화의 이념은 산업화로서, 다른 한 역사적 충동인 민주화를 대치하였다. 이것은 적지 않은 왜곡과 긴장과 갈등은 가져 왔다. 근대화와 민주화는, 조화된 사회 발전과 그 수립을 위하여, 반드시 상보적일 수밖에 없는, 두 이념일 것이다. 그런데 근대화 기간동안 정부의 이념적 발언이 <중진국>, <선진국>, <국력>, <수출증대>, <외화획득>, <국위선양> 등 일체 국가나 사회의 전체적 차원에서만 이야기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다.(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물량주의>라고 비판되는 경향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조금 차원을 낮추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박정희시대에 전체차원의 이념을 조금 더 국민 생활의 현실로 끌어내리려는 노력의 표현의 하나로 <새마을>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도, 비록 지역 단위이기는 하지만 <마을>이라는 집단적 범주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본다. 하령든 이러한 전체적이고 집단적인 범주로 표현되는 국가 목표에 따라 국민적 노력이 요청되어 온 것이 지난 20여 년 동안의 근대화 과정이지만, 이러한 집단적 이념이 어떻게 구체적인 국민 생활 속에 번역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면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계속적으로 등한시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이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민주화의 이념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가나 사회 전체와 시민 개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시민이 응분의 이익과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이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넘어가는 공동체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 관계되는 이념이었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개인의 응호와 개인의 시민 사회 속으로의 훈련의 요청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든 무엇이든 변화의 시대에 풀려나오게 마련인 개인주의와 또 그러한 시대일수록 요청되는 집단적 이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제의 부재로 하여, 근대화의 과정은 심한 부조화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국력신장 또는 경제력 증대의 요청은 현실적으로, 우선 사회와 정치의 모든 차원에서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였다. 커다란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커다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는 제일 차적으로는 사람의 의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60년대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의지의 언어들, <소신>, <박력>, <결단>, <하면 된다>, <강력한 추진>과 같은 말들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들이 더러 농담으로 쓰이는 것을 보거니와 이것은 이러한 말들의 이중적 가능성은 드러내준다.

<하면 된다>는 의지는, 진정한 집단적 기울에 의하여 순치되지 않는 한, 온갖 사리와 인간적 배려에 대하여 폭력적 파괴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차원에서 그렇고 일상적 대인간 관계, 대사를 관계에서 그렇다.

근대화의 에너지의 표현으로서의 의지는 국가와 사회의 힘을 증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전체의 이념 하에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국력의 명분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일 수도 있고 서로 상치되는 수도 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감추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것은 아마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심층에서 작용하는 것 이어서, 당사자 자신도 분명히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강력한 소신이 국가적 명분에 사용되든, 개인적 이익의 추구에 이용되든, 국민 일반에게, 근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물질적 이익의 추구였다. 이것은 <잘살아보자>는 말로서 표현될 수 있는 소망이었다. 물론 <잘살아보자>는 말 자체는 반드시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물질 추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잘살아보자>는 것은 근대화 추진 세력으로부터 나온 말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주목할 것은 근대화 추진 세력의 핵심이 정부라고 할 때, 정부로서는 근대화의 이념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한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제 5공화국의 헌법에 와서 <행복의 추구>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198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국민의 개인적인 행복이 마땅히 주장되고 확인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도 그러한 이념이 단지 문서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 정식으로 생활의 현실 속에 삼투되어 있는 권리로 수립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행복의 추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든 아니되든 근대화가 국민에게 의미한 것은 행복의 추구, 그것도 가장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의 추구였다. 그리고 모든 암시장의 거래가 그러하듯이, 비공식적으로 추구되는 행복은 가장 극렬하고 속된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잘살아보세>라는 것은 공적인 修辭 속에 위장된 채로(중동의 노동자는 국가적 의의를 갖는 <외화획득>을 위하여, 기업가는 국가적 의의를 갖는 <산업건설>)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잘살아 보자는 것이고 또 자주는 나만 잘 살아보자는 것으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행복의 추구는 인간의 원초적 소망이다. 이것은 특히 인간의 기본적 생존의 확보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그렇다. 5.16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선언은 <기아선상에 해매는> 국민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지만, 60년대 초뿐만 아니라 개항 이후 줄곧 먹고 사는 문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

제였다. 이것은 비단 식량의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식주 생활의 전부에 걸친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화 추진 20년의 가장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이러한 기본적 생존의 문제가 적어도 3분지 2는 일단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사라진 중요한 말이 <춘궁기>라든가 <보리고개>라는 말이다. 먹는 것의 질이 라는 면에서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후퇴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근의 위협과 같은 최소한의 관점에서 볼 때, 식생활의 문제는 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생활에 있어서도 산업화 제일단계를 이루었던 섬유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일단은 기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졌고, 오늘날의 문제는 오히려 낭비적인 의생활의 증후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문제는 아직도 그 해결이 요원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에 집이 계속적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사회적 계획이 없는, 이윤 동기에만 의존하는 주택 건설은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로서의 주택문제를 아직도 풀 수 없는 난맥 속에 남겨두게 되었다.

주택의 문제는 경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매우 모호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는 사람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활동이면서, 동시에 생존 이상의 행복한 삶을 확보하려는 활동이다. 주택은 생존과 행복의 필요에 걸쳐 있는 애매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물건이다. 깊어 죽는 사람, 또는 당장에 굽주림에 괴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주택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깊어 죽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바와 같이 얼어 죽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 주택 문제는 衣食의 문제만큼 긴급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사실 주택 문제는 최소한도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도의 행복의 문제이다. 위에서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행복의 추구라는 범주에 포함해서 말했지만, 사실 행복은 생존 이상의 어떤 삶의 신장에 관계되는 인간소망의 대상이다. 1980년대 와서야 <행복의 추구>라는 것이 국가적 또는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위에서 지적하였지만, 이것은 1980년대 와서야 경제가 생존에서 행복의 마련을 위한 활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생존에 비하여 행복은 긴급성이 적고 선택이 넓어지는 영역에 성립하는 것인 까닭

에, 훨씬 더 조심스러운 선택의 원칙, 조화와 균형의 원칙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때 선택의 원칙은 긴급한 생존의 필요를 넘어 선 삶의 가능성에 대한 진실된 이해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조화된 질서를 느끼는 정치 감각에 이어져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삶의 조화된 開花를 향하는 문화 감각에 이어져 있다. 외면적이고 물량적인 경제 발전의 추구만으로 얻어질 수 없는 감각이 이것이다. 지난 20년 동안의 산업화는 이제 생존에서 행복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의 산업화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국가주의적 이념에 의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물질추구에 의지했던 만큼, 사회의 특정 분야와 특정 계층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는 생존으로부터 행복의 단계로 들어서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비친 바와 같이, 이 행복의 경제가 참다운 의미에서 행복의 구현에 기여했는지는 크게 의문되는 바 있다. 다시 말하여 열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주택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삶의 영위를 위한 적절한 공간의 확보란 의미에서의 주택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비친 바와 같이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단순한 공간의 문제이면서 보다 좋은 공간, 사람다운 삶을 위한 공간의 문제이다. 사람다운 삶의 공간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미 확보된 공간에도 문제는 남아 있다. 절대적 주택공간의 부족을 잠시 덮어 둘 때 우리의 주택이나 공공건물들이 지난 20년 동안에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농촌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은 주택의 모양과 구조를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로 인하여, 주택생활이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나 참으로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향상되었는가 하는 것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적어도 추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택의 변화가 내적의 삶의 필요와 삶의 창조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밖으로부터 부과된 것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관의 요구만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과 경쟁적 개인주의의 욕심을 포함한 외부적인 원인이 우리의 건축의 원리로서 작용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행복은 관이 과하는 규격화된 모델과 상업주의와 경쟁적 개인주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가장 폭발적인, 또 다분히 조화된 삶의 이상에 대하여 파괴적인 세력이 되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가 생존의 단계에서 행복의 단계로 넘

어감에 따라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산업화가, 모든 국가주의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추구를 향한 이기적 욕망의 에너지에 의존해 왔던 데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인은 경제 성장의 경험을 통하여, 비록 은밀하게 일망정,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욕망의 정당성은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욕망의 실현을 보는 동안에 이 욕망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에 가히 욕망과 기대의 혁명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자유와 평등을 준비하고 실질적 경제활동을 향진시켰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었지만, 거기에 따르는 긴장과 마찰은 사회를 내면적 붕괴의 직전까지 몰아갔다. 이러한 붕괴의 위협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정부나 국민이 다같이 느낀 것으로서, <모리배>, <정상배>, <삼분폭리>, <부동산투기>, <큰 손>, <복부인>, <독점기업>, <한탕주의> 등에 대한 주기적인 사회적 분노의 폭발은 이러한 위기 의식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 위기 의식은 죄의식의 다른 면이거나 아니면 선망의식의 한 표현이란 면이 강했다. 모든 사람이 욕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갖가지 수단을 통한 욕망의 행진이 경제의 필수적인 요건처럼 되었다는 것이었다.

20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알베르트 모라비아는, 한국의 인상을 요약하여, 가난의 깨끗함이 있는 나라라고 한 바 있다. 사람들의 행동은 생존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고, 거기에는 필연이 부여하는 動機의 단순함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1980년대의 오늘을 특징지우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소비주의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의 공화당이 발명한 말에 <소비가 미덕>이란 말이 있었지만, 이제야 소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된 것이다. 여기서 소비주의란 필요를 위한 소비보다도 소비를 위한 소비에 의하여 특징지워지는 생활 경향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소비에서 광고는 필수적인 것이다. 필요한 것의 소비는 광고가 있든 없든 일어나지만, 필요 없는 것의 소비는 설득을 필요로한다. 여기에 광고와 대중 매체의 발달이 필요하다. 소비와 대중매체와의 관계는 서로 주종의 관계에 있기도 하고 평행관계에 있기도 하다. 광고가 소비욕을 자극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그것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의 암시이다. 행복의 암시는 어떤 생활 유형이나 생활 수준에 관계되어 있다. 이 생활 유형은

소비를 많이 하는 생활 유형으로서 제시된다. 또 그것은 어떤 격식을 가진 것으로도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계층의 일정한 인간형의 삶의 전형으로서 투사된다. 이때, 이 인간형은 말할 것도 없이 소비적이고 공격적이며 상층계급적인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광고의 경우, 행복의 약속과 바람직한 삶과 인간은 외국의 매력에 이어져 있다. 그리하여 상품판매에 있어서 피에르 카르테이나 지방시와 같은 외국의 유명 상표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 아름다움의 원형도 점점 서구인에서 찾아지게 되었고 삶의 스타일까지도 서양적인 것을 모방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서양지향은 단순히 광고에 자극된 표면적 현상만은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국제적 연결관계를 가지고 국제적 스타일의 삶을 사는 경영자, 지식인, 관료 계층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소비주의는 인간 행복의 이상을 물질과 완전히 일치시킨다. 그리하여 그것이 광고에 자극된 것인든 아니든 생활의 모든 국면을 물질화시킨다. 그런데, 여기에서 극복할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생각되는 물질이 아니라 상품적 가치의 면에서 파악되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생활이 물질에 의하여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적 관계 속에 있는 생활에 의하여 물질이 변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사람은 어느 시기에나 세계가 제공하는 물질의 기반 위에서 생존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소비주의와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삶의 질서 속에서 이 물질은 사람과의 본래적인 관계를 상실하고 단지 시장에서의 상품적 가치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모든 물질의 자산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가령, 집은 사람이 땅의 불안정 속에서 땅에 뿌리를 내리는 물질적 근거이다. 그러나 집은 어느 사이에 <집>이기를 그치고 <부동산>으로 변모하였다. 땅은 삶의 근거가 아니라 주로 매매의 대상, 투기의 대상이 된다. 집을 짓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하여 보다도 팔기 위하여 짓는 것이 된다.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 이사하는 국민이 되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이 가장 손쉽게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산화는 물질 분야만이 아니라 정신분야에도 일어난다. 70년대에 있어서의 유한계층의 성장은 미술품과 골동품 경기를 가져 왔다. 물론 이것은 미적 감각의 세련화보다는 자산 확보의 동기와 과시욕에 의하여 자극된 것이

었다.

자산화는 생활과 문화의 모든 표현의 수단화, 간접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물질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궁극적인 상업가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간접적 의미 만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사랑이나 결혼이나 교우, 또는 그 밖의 인간관계들이 자산적인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재평가를 받게 된다. 지식의 추구는 지위 향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로 의미를 갖는다. 성은 쾌락의 수단이 되고 결혼시장이 성립하고, 향우회, 동창회가 유리한 인간조직을 만들어 준다. 일류학교를 향한 집념은 절 높은 교육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지식과 지식에 대한 증명을 확보하자는 욕구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무한정한 자산적 이익의 추구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인간관계에도 나타난다. 그리하여 나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수단적 의미 만을 가지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는 관계는 희귀하게밖에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람의 사람에 대한 관계는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이거나 경쟁적 투쟁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것이 소비주의와 상업주의 사회의 전형적 인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주의적 개인이 참으로 개인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상업주의 사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삶의 전체적 사회화이다. 시장과 광고와 획일화된 상품 소비는 점점 많은 사람들을 점점 많아지는 상업적 그나풀에 얹어 하나의 사회 공간으로 끌어들인다. 이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규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파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들의 경쟁적 이기주의는 이러한 사회화, 획일화의 다른 면을 이룬다. 사람들이 참으로 독자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거기에는 비교의 기준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적 이기주의 또는 개인주의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소비주의 사회가 풀어놓는 욕망은 유니크한 대상의 추구와 창조에 의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부과하는 획일적 상품에 의하여 충족된다. 여기에서 비교와 과시와 나쁜 종류의 경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소비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이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흔히 이야기 되는 인간 상실은 자아의 상실로부터

온다. 소비주의의 인간은 자신의 판단 중심을 갖지 않는다. 그의 내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압도되어, 주체적 탄력성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수단주의와 짹을 이루게 된다.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상품사회의 확실화, 평면화, 간접화의 한 종속 현상이지만, 내면적 동기의 관점에서 따져 볼 때, 자신의 독자적인 내면 생활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독자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물질적 행복의 맹목적 추구가 가져온 여러가지 사태에 대하여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려와 경고가 표현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에 대하여 <인간회복>이나 <가치관의 정립> 등의 필요가 주창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경고 또는 주창이 얼마나 효력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역설적인 것은 흔히 가치의 옹호를 위한 주장까지도, 소비사회의 다른 물질적 정신적 자원들처럼, 수단화, 간접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한때 많이 이야기되었던 <인간개조>나 <충효사상>이나 <새마음 갖기 운동>은 그 자체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권력 체계와 그에 편리한 도덕적 태도를 수립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모든 것을 수단화하려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도의적 가치가 뒤틀리는 예이지만,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상업주의적 왜곡에도 관계된 것이다. 어떤 회사의 광고에서 정직과 봉사가 이야기될 때, 그 광고의 독자들은 그것을 회사의 제품을 팔려는 의도에 의하여 수단화되고 있는 도덕적 가치의 타락으로 본다. 또는 전통 문화재는 그것의 정신적 교훈들과 문화적 가치로 인하여 존중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관광 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분장 전시된다. 어쨌든 모든 것이 수단시되는 권력주의와 상업주의 세계에서, 그 의도에 관계 없이 도의의 회복이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인 왜곡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많은 도의적 주장과 가치의 옹호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에서 너무나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도의는 이미 이루어진 세속화 혁명, 행복에의 열망을 포용하면서 이를 개인적, 사회적 조화 속에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기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인 뜻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조심스럽고 깊은 뜻에서 인간의 삶에 대하여 새로운 물음을 묻는 것을 뜻한다. 과시를 위한 문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비판 검토하

는 문화의 성숙을 통해서 이러한 물음은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물음은 공동체적 관심과 기울에 연결되는 것일 것이다. 도의가 현실과 관계 없는 추상적 원칙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물질을 포함하는 것이라야 한다면, 그것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의 상호작용의 현실에서 시민적 기울의 일부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적이고 시민적인 도의는 주어진 근대화와 행복추구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의 제도적 수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때, 사회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도의는 위정자와 사회지도층의 참으로 진지한 노력——즉 다른 것은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노력으로 시작되고, 문화적 작업으로 심화되고, 민주적 사회 질서의 수립 속에 현실로 정착될 것이다.